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24일(토)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2018. 11. 23 (금) 16:40 ~ 18:10

## 〈세션3〉 기본소득과 한국 복지정치

사회: 백승호 (가톨릭대)

발표1: 기본소득과 복지정치운동. 정의당의 경험(청년사회상속제)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표2: 기본소득과 복지정치운동. 녹색당의 경험  
이상희 (서울녹색당공동위원장)

발표3: 기본소득과 복지정치운동, 청년네트워크의 경험  
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 기본소득과 복지정치운동, 녹색당의 경험: 기본소득 공약의 구체화에 따른 고민들

이상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1. 탈성장과 기본소득

자본과 성장 중심의 속도전에서 생명과 사회적 약자는 가장 먼저 소외되고 희생됩니다. 생명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억압의 구조를 바꾸는 녹색전환을 목표로 한국에서도 2012년 녹색당이 창당했습니다.

매년 정부는 국가성장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목표 달성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집중해왔던 기간산업의 구조, 경제구조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기후변화와 탈핵,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을거리, 차별 없는 평등사회, 주거권 보장과 토지정의, 동물권 보장, 배움(교육)의 녹색화, 이주민과 장애인의 권리보장, 페미니즘, 탈토건 안전사회, 한반도 비핵평화,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조는 '탈성장'입니다.

너무 익숙해진 상황을 바꾸는 것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변화에 대한 거부로 엄청난 반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과 저성장시대를 맞이하며 노동, 개인의 삶, 사회서비스, 경제구조 재편성 등의 변화에 기본소득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2. 녹색당 기본소득 정책의 진화와 고민

2012년, 창당 이후 한 달 만에 치른 총선에 대농에게만 유리한 농업직접지불제 대신 소농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공약과 더불어 하루 6시간 노동, 생활임금보장, 노사 이익균점제와 같은 노동공약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농민기본소득제가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노동공약으로는 청소년 노동착취 근절, 좋은 공공복지일자리와 녹색에너지일자리 창출이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공약의 큰 변화는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자리 공약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녹색당은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

가능성과 함의를 주제로 당원들의 입장을 듣고, 기본소득 정책안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긴 논의 끝에 2015년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농민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며, 개별성을 고려한 정책설계로 한국사회의 전환을 만들자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당론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한 이후 기본소득 전국투어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제시하였습니다. 총선 공약에서 제시된 기본소득 공약은 기존 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기본소득세법 및 기본소득특별회계법 제정 등 입법·행정적 조치도 포함하여 제도의 구체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이 명시된 부분입니다. 이전의 기본소득 공약이 재원과 시기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과 달리 1단계에서는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2단계에서 소득세 중심의 보편증세와 생태세 신설로 전 연령대에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설계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던 2016년에 녹색당의 기본소득 공약은 부의 재분배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제별로 구성된 ‘기본소득 선거운동본부’는 김주온 비례후보와 함께 저소득 주민, 노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청년, 귀농운동본부 등 다양한 사람들과 기본소득 간담회, 거리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녹색당 총선 후보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2016년 총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정치운동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기준과 정부에 대한 시민의 낮은 신뢰, 보편적 복지인프라의 미흡함은 ‘재원 마련의 한계’와 맞물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당내에서는 기본소득 의제모임이 구성되어 기본소득 세미나와 지역별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녹색당 등 소수정당의 노력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정치 의제로 부상한 것은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등 해외의 기본소득 시도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자치단체의 유의미한 시도를 바탕으로 현재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부재,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에 대한 일자리와 소득보전에 대한 요구,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다는 사회현상이 맞물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조기 대선 시기 기본소득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안하는 정책의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의 낯설음을 넘어 ‘어떤 기본소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과정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고, 지방정부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비수도권, 농촌지역에 초점을 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기본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제주특별도지사 고은영 후보는 전 도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신지혜 후보는 서울의 자치구 중 2곳을 선정하여 연 12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전 도민이 68만 명이며, 서울시는 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차로

같은 수준으로 공약화하기보다 지역적 특성에 맞춘 기본소득 공약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고 충분치 않습니다. 두 후보 모두 당선이 되지 않았음에도 공약 자체의 실효성을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시민들이 기본소득의 확대를 요구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공고한 시스템에 미세한 균열이라도 내기에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이 너무 적은 액수는 아닐까 고민됩니다. 서울시는 너무 많은 인구가 있기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과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구와의 협의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정책이 다른 지역구로 확대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드러내기에 지금과 같이 저비용의 제한된 대상의 기본소득 시행은 오히려 끊임 없이 제도의 효과성에 공격을 받는 방법은 아닐까 고민입니다.

### **3. 기본소득 관점으로 기존 시스템 바꾸기**

물론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편적 사회수당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나미비아의 보편적 수당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개별적 보장소득'은 행복한 가족을 강요하는 체계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맞춘 정책 설계로 개인(의 합)이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보편성과 개별성의 관점으로 복지시스템이 변화하는 가운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 기본소득 관점의 현금 지급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 등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보도된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 시행에 대한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퍼주는 걸 보면, 도지사 되어 하고 싶은 일이 없는가보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단지 청년배당에 대한 악플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삶과 제도의 연결 경험의 부재한 시민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부재가 제도적 상상력을 축소하고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험확대, 충분한 자원 확보를 위한 세수조정, 그리고 개별화된 지원방안에 맞춰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녹색당 기본소득 공약

### 2012년 총선

- ◆ 무너지는 생명산업, 농업을 되살립시다
  - 농민기본소득 보장, 소농 지원
- ◆ 모두가 피곤한 사회, 벗어납시다
  - 칼퇴근법 추진, 주30시간 노동(하루 6시간)
  - 최소필요노동으로 생활임금 보장
  - 노동자 경영참여제와 노사 이익균점제 도입
  - 대·중소기업 부당거래 막고, 원·하청 기업간 이윤 양극화 개선

### 2014년 지방선거

- ◆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 취약한 농촌복지 개선, 농민기본소득제
- ◆ 동네에서 먹고 살자
  - 노동인권도시 선언, 노동인권센터 설치조례 제정, 비정규직 정규화, 생활임금제 도입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늘리기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착취와 부당대우 근절
  - 좋은 공공복지일자리, 녹색에너지일자리 창출

### 2016년 총선

- ◆ 노동중독사회를 넘어 기본소득을 통한 삶의 재구성
- [1단계]
-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 우선 지급
    - 기본소득지급액이 기초생활보장선 미달 시 보충급여 지급
    - 청년배당 실험 확대하고,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
    - '월급형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
  -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생태배당금 지급
  - 기본소득세법 및 기본소득특별회계법의 제정 등, 필요한 입법·행정적 조치 추진
    - 기본소득세법 제정과 기본소득특별회계법 신설
    - 실효세율을 1%로 과세하는 등, 토지보유세 강화
    -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 확충
    - 생태세 및 개별소비세의 세수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
- [2단계]
-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

- 보편증세(소득세 보편증세 중심)와 생태세 신설로 세수확보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보장하자

-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과로사회 탈피
  - 주 35시간 노동제 법제화하고 '칼퇴근' 보장
  - 심야노동을 금지하고 교대제를 개선하여 수면시간 보장
  - 휴일을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식년 제도 도입
- 정당한 노동의 가치 인정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실질적인 생활임금제도 정착
  - 노동자 경영참여 및 노사 이익균점제를 통한 소득분배율 획기적 개선
- 사회의 공공성 강화, 대안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생성
  - 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 사회적경제를 확대하고 대안적/녹색일자리 창출
-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 금지
  - 안전한 노동환경과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2018년 지방선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공통조례(안) 작성

- 기본소득 제도화로서의 구체성
- 지방소멸론, 한계마을이라는 절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 예산사업으로 청년 수가 적은 비수도권, 농촌지역 실행가능성 높음.
- 농민기본소득을 농촌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디딤돌 정책

◆서울시장 공약 :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신지예

- 서울형 청년기본소득 제도 도입
  - 목적 : 서울 자치구와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해, 한국형 모델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시행 확산
  - 대상 : 재정자립도 가장 낮은 지역과 청년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곳(총 2개구)을 자치구와 협의, 선정하여 매칭펀드로 시행.
  - 방식 : 분기별 30만원, 인구(만19세~21세) 지급  
(20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관악구 기준 연 496억 원 소요)
  - 재원마련: 지방세 항목인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50%로 높여 마련
- 노동시간 단축으로 평등 돌봄 실현
  - 주 35시간 도입,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남성 육아휴직 사용 지원
  - 여성에게 저임금 노동과 가사·돌봄노동을 동시에 떠안기는 현행 시간선택제 일자리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 : 제주를 지켜라 녹색바람 고은영

○전 도민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 제공

- 추진계획 : 68만 전 도민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 소요예산 : 연 6,800억원
- 재원마련 방안
  - \*토목예산감축목표제(전년 대비 총액기준 5% 삭감) 시행 2,500억원
  - \*예산의 합리화로 낭비예산 축소 500억원
  - \*JDC 면세점 수익 환수 1,000억원
  - \*부동산 보유세 강화 5,000억원
  - \*카지노 납부금 비율 상향 조정 250억원
  -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강화 100억원

○고은영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 환경·돌봄·공동체·사회적 이슈 관련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 다변화 지역화를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 쓰레기, 먹거리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지원

◆경기녹색당 6.13 지방선거 공약

○청년기본소득조례 제정

- 불안정 노동사회 청년(19-24세)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 지급
- 월 10만원, 청년에게 매월 14시간의 여유시간
-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 지역화폐 지급 가능

○농민기본소득 지급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지보존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 농가당 매월 20만원 지급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의 절반 이하는 지역화폐 지급 가능